

탈냉전기 샌프란시스코 체제 변용과 남·북·일 삼각관계*

서의동**

본 연구는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탈냉전기 이후 변용을 거치며 일본과 남한, 북한이 전략적 삼각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을 고찰한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미국이 냉전 시기 동아시아에서 일본을 군사 거점으로 삼아 구축한 자유주의 안보 체제이다. 패전국 일본의 전쟁 책임을 최소화하는 '관대한 강화'로 인해 주변국과의 갈등이 응결됨으로써, 지정학적 분단과 역사심리적 분단에서 비롯된 동학(動學)이 작동하는 '이중 분단'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체제는 미국의 질서 규정력, 일본의 소극적 자율성, 일본의 평화국가 정체성, 진영 내 갈등 잠복이라는 네 가지 특징을 지닌다. 탈냉전기 일본, 한국, 북한 3자 간의 상호 작용은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자국에 유리하게 변용하기 위해 경쟁하는 '전략적 삼각관계' 구도를 형성했다. 체제가 내장한 긴장이 초래한 동아시아 갈등, 역대 행위자들의 체제 변용 욕구가 삼각관계의 동학이다. 외교적 자율성을 강화한 일본과 핵보유국이 된 북한은 삼각관계에서 독립적 행위자로 나서게 되었다. 한국은 남북관계에서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해 전략적 삼각관계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본 논문은 탈냉전 이후 역대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변용되는 과정을 살피고 남·북·일 삼각관계 속에서 전개되는 '한반도 현상변경 게임'을 고찰했다.

주제어: 샌프란시스코 체제, 전략적 삼각관계, 역사수정주의, 존재론적 안보, 한반도 현상변경

- * 이 글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탈냉전기 일본의 샌프란시스코 체제 변용과 남·북·일 갈등”(북한대학원대학교, 2026)의 핵심 논지를 발췌하여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익명의 심사평을 제공해 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 경향신문 기자,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

1. 서론

본 연구는 동아시아 냉전 질서인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탈냉전 이후 국제 정세의 변화와 체제 내에 잠복한 긴장이 발화되면서 균열하는 상황을 일본이 자국에 유리하게 변용시키는 과정에서 한반도 분단체제의 현상 변경을 추진하는 한국, 북한과 어떠한 갈등을 빚었는지를 고찰하려는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일반적으로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을 거치며 미국에 의해 형성된 동아시아 질서를 가리킨다. 본 연구에서는 이 체제의 비물질적 차원에 주목해 이 체제를 패전국 일본에 전쟁 책임을 묻지 않은 ‘관대한 강화(lenient peace)’로 인해 주변국과의 갈등이 응결됨으로써 지형학적 분단과 역사심리적(historical-psychological) 분단에서 비롯된 동학(動學)이 작동하는 ‘이중 분단’ 체제로 규정하고자 한다. 미국의 압도적인 질서 규정력, 일본의 소극적 자율성에 의해 주도된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일본이 전수방위(專守防衛)의 ‘평화국가’로 국제사회에 복귀했으나 반공 자유 진영 내에 ‘이중 분단’에 따른 긴장이 내장(embedded)된 것이 특징이었다. 침략전쟁을 벌이다 패전한 일본은 전후 빠르게 평화와 번영을 달성했으나 한반도에서는 남북 분단과 전쟁이 벌어졌으며 탈식민 과제도 해결되지 못한 데 따른 긴장이 집중되었다.

탈냉전을 계기로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기반이던 미일 동맹이 경제 마찰, 걸프전 파병에 따른 갈등으로 이완되고, 식민지배와 전쟁 책임이 부각되자 ‘존재론적 불안(ontological insecurity)’을 안게 된 일본은 아시아 지역주의에 참가하려다 미국의 견제를 받았고, 한국·중국과는 역사·영토 갈등을 겪으며 정체성 혼란을 겪었다.

이에 대응해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변용시키려 했다. 물질적 차원에서는 집단적 자위권의 합법화, 미일 동맹의 글로벌화, 인도-태평양 구상을 통해 미국과의 동맹을 지렛대로 지역 주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비물질적 차원에서는 역사수정주의(historical revisionism)의 공식화와 북한의 일본인 납치를 토대로 한 ‘피해자 정체성’에 기반한 감정 정치로 주변국과의 갈등에 대응했다. 변용된 체제는 미국의 질서 규정력이 여전히 유지되는 가운데 일본이 자율성을 확대하고, 평화국가에서 ‘보통국가’로 정체성 전환이 이뤄진 것이 특징이다. 탈냉전 이후 본격화된 주변국과의 역사·영토 갈등 역시 체제의 변용을 촉진했다.

탈냉전기 일본, 한국, 북한 3자의 상호작용은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용하기 위해 경쟁하는 ‘전략적 삼각관계 (strategic triangle)’¹⁾ 구도를 형성했다. 북한의 핵무력 보유, 남북관계 분리 시도, 일본의 대북 자율성 확대 등의 변화가 남·북·일 삼각관계를 정립(鼎立)시킨 것이다. 체제에 내장된 ‘이중 분단’이 초래한 동아시아 역내 갈등과 그에 따른 체제 변용의 결과가 남·북·일 전략적 삼각관계의 동학이 되었다는 것이 본 연구의 중심 가설이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질문을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균열과 변용은 어떠한 형태로 전개되었는가. 둘째, 체제 변용의 결과 동아시아에서 일본, 한국, 북한 등 3자 간에 전략적 삼각관계는 어떠한 동학에 의해 형성되었고 3자 간 상호작용의 내용은 어떠한 것인가.

1) 본 연구에서는 로웰 디트머(Lowell Dittmer)가 발전시킨 삼각관계 모델을 차용해 분석할 것이다. Lowell Dittmer, “The Strategic Triangle: An Elementary Game-Theoretical Analysis,” *World Politics* 33, no. 4 (1981): 487-515.

본 연구는 5장으로 구성된다. 2장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비물질적 성격에 대한 고찰을 통해 체제를 재정의한다. 3장에서는 탈냉전기 체제의 균열과 변용의 양상을 일본과 남북한 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4장에서는 체제 변용의 결과로 형성된 남북한 전략적 삼각관계를 디트머의 삼각관계 모델을 적용해 분석한다. 5장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밝힌다.

2.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역사심리적’ 재검토

미국 시카고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이리에 아키라(入江昭)는 1966년 출간한 『일본의 외교(日本の外交)』에서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일본의 주권 회복과 어느 정도의 군비, 그리고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에서의 미국 군사력의 유지를 기조로 하고 남조선·대만·필리핀·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를 포함한 군사체제로 소련·중국·북조선의 군사력에 대치하는 것”으로 정의했다.²⁾

이리에 이후 여러 학자가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재정의했다. 김학재는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으로부터 유엔에서의 ‘인정투쟁’, 임시적 군사정전을 위한 판문점 협상의 시작, 일본과의 자유주의 평화협약과 미일 상호방위조약 체결로 ‘아시아 패러독스’로 불리는 아시아 특유의 국제질서가 형성되었다고 분석했다.³⁾ 한국전쟁에 참전한 중국은 전쟁의

2) 이리에 아키라(入江昭), 『日本の 外交』, 이성환 옮김(서울: 푸른미디어, 2002), 199.

3) 김학재, 『판문점 체제의 기원: 한국전쟁과 자유주의 평화 기획』(서울: 후마니타스, 2015), 275-357.

정치적 해결을 중국의 국제적 승인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전후 질서의 포괄적 해결과 연결 지으려 했으나 미국은 중국 불인정과 판문점 군사정전체제 수립, 일본과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로 해결하려 했다고 본 것이다. 판문점 군사정전체제는 한국 문제의 평화적·정치적 해결을 배제한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한국전쟁을 거치며 일본이 ‘문제(question)’에서 ‘모범(example)’로 뒤바뀐 반면 일본 식민주의에 대항한 북한이 동북아시아의 위협으로 규정되는 ‘위협전이’ 현상을 제도화한 것이다. 신옥희는 이 위협전이가 한국전쟁과 그를 통한 행위 주체의 ‘위협 투사’를 통해 이뤄졌으며, 이는 미일 관계를 축으로 하는 샌프란시스코 체제 형성으로 제도화되었다고 본다.⁴⁾ 이삼성은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일본이 동일체가 되고, 정체성이 전환된 중국대륙과의 대화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지정학적 긴장, 정치사회적 체제와 이념의 이질성으로 인한 긴장, 역사적 인식의 간극으로 인한 역사심리적 긴장이라는 세 차원의 긴장구조가 들어섰다고 봤다.⁵⁾

위의 선행 연구들을 반영해 본 연구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비물질적 성격’에 주목하고자 한다. 일본에 대한 ‘관대한 강화’였던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식민주의와 전쟁에서 비롯된 역내 갈등 요인을 해결하지 않음으로써 분단, 역사·영토 갈등이 생산하는 대립과 적대가 체제의 주요한 작동원리가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해결 과제였던 역사, 영토 문제가 탈냉전기 동아시아 국제정치에서 주요 변수가 된 것이다. 주권 국가 간 역사 및 영토 갈등이 ‘감정 정치(emotional

4) 신옥희, “‘일본문제’에서 ‘북한문제’로: 한국전쟁을 통한 동북아시아에서의 위협 전이,”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8집 1호(2016), 168.

5) 이삼성, 『동아시아 대분단체제론』(파주: 한길사, 2023), 41-48.

politics)⁶⁾라는 기제에 의해 발화한다고 가정하면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역사심리적’ 분단 차원에서 해명하는 작업이 동아시아 국제정치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

‘역사심리적 분단’은 특정 지역 질서나 국가 간 관계에서 표면적 제도적 분단을 넘어, 과거의 전쟁·피식민 등의 경험이 집단기억·감정·정체성의 층위에 내면화되어 세대를 넘어 지속되는 심리적 경계와 인식의 구조로 정의할 수 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전반에 걸친 일본의 중국 침략과 한국 지배의 기억은 중국·남북한과 일본을 구별 짓는 역사심리적 단층을 형성했으나, 이는 냉전체제로 반세기가량 응결(凝結)되었다가 탈냉전 이후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한일 간의 역사심리적 단층은 각국의 역사 기억, 보편적 가치와 긴밀히 연결되었다. 한국은 민주화 이후 ‘인권’이 보편적 가치로 정립되면서, 19세기 근대화 이후 ‘문명’이나 ‘발전’,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평화’ 등이 중심 가치로 자리 잡은 일본과의 역사심리적 단층은 벌어들 수 밖에 없었다. 아사노 도모미(淺野豊美)는 개항 이후 서구 열강과의 ‘불평등 조약’ 체결로 차별대우를 받았으나 조약 개정을 달성하고 청일·러일 전쟁에서 승리하여 ‘열강’으로 인정받고 대등한 주권 국가가 되었다는 서사가 일본 국민의 핵심인 반면 한국의 국민사는 ‘의병’이 학살되고 인권이 유린당했으며, 러일전쟁 이후 일본의 강점을 겪으면서도 민족이 주체성을 잃지 않고 저항하며, 결국 독립을 쟁취했다는 서사가 핵심에 자리 잡은 것이 각기 대조적인 보편적 가치를 산출했으며 이것이 양국 간 국민적 긴장을 낳고 있다고 봤다.⁷⁾ 국민의

6) 국제관계에서 감정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은용수·용채영, “국제정치학 감정연구의 쟁점, 함의, 그리고 항배,” 『세계정치』 제29권 2호(2018), 175-183 참조.

7) 淺野豊美, “日韓の國民形成の斷層と和解學: 價値と記憶の融合をめぐる内外政治の

감정과 기억을 무의식적으로 지탱하는 보편적 가치가 한일 간에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전쟁으로 동아시아에서의 ‘위협’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전이되었을 뿐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패전국 일본은 미국을 움직여 한국을 평화회의 참가국에서 배제토록 했다.⁸⁾ 샌프란시스코 체제에서 북한은 동아시아 역내의 위협 요인이 되었고, 한국은 차별되었으며, 재일조선인들은 지위 불안정 상태에 놓였다. 남북한 거주민, 재일동포들은 샌프란시스코 체제에 기반한 전후 동아시아 질서의 정당성에 의문을 품었다.

제2차 대전 이후 유럽에서는 동서독이 각 진영 내에서 역사심리적 긴장의 물질적 토대인 국경 문제를 해소⁹⁾한 반면 동아시아에서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국가 간 경계를 ‘미해결 상태¹⁰⁾로 방치함으로써 갈등을 잠재화했다. 일본의 침략전쟁과 식민지배, 난징대학살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가 남긴 상처로 인한 역사심리적 긴장도 해소되지 못한 채 응결되었다. 탈냉전은 동아시아에서 역사심리적 긴장을 전면에 위치시켰으며, 이념 담론이 퇴장한 공백을 역사담론이 매우게 되었다.

이런 논의를 종합해 본 연구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미국이 2차 세계대전과 한

共振” 淺野豊美 編, 『和解學の試み』(東京: 明石書店, 2021), 315-351.

8) 정병준, “한국의 샌프란시스코평화회담 참가문제와 배제과정,” 『한국과 국제정치』 제36권 3호(2020), 15-17.

9) 이동수, “역사화해를 위한 조건: 독일-폴란드 역사화해를 중심으로,” 『서강인문논총』 제56집(2019), 115-118.

10) 이를 ‘의도적인 미해결’로 보는 대표적인 연구는 하라 기미에(原貴美恵),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동아시아 영토갈등의 기원,” 『영토해양연구』 제22호(2021), 9-10.

국전쟁을 거치며 동아시아에서 일본을 군사 거점으로 삼아 구축한 냉전형 자유주의 안보체제로, 일본에 전쟁 책임을 묻지 않는 ‘관대한 강화’로 인해 주변국과의 갈등이 응결됨으로써 지정학적 분단과 역사심리적 분단에서 비롯된 동학이 작동하는 ‘이중 분단 체제’이다.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미국의 압도적 질서 규정력과 일본의 소극적 자율성이 작용해 형성되었으며, 일본은 헌법 개정과 미군정의 민주화 조치로 ‘평화국가 정체성’을 획득했다. 이 체제가 식민주의와 침략전쟁 책임 문제를 방기한 데 따른 갈등이 자유주의 진영 내에 잠복했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한·미·일 3각 안보협력 구조에 편입되었으나, 중국대륙과 미일 동맹으로 갈라진 대분단체제¹¹⁾의 ‘역사심리 구조’로 본다면 반대 진영에 위치했다. 이러한 이중성이 탈냉전 이후 한국 국내정치의 변수로 작용했고, 샌프란시스코 체제 변용의 동학으로 작용했다.

3. 탈냉전기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균열과 변용

일본은 냉전 해체의 전환기에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참여하려던 시도가 미국의 견제를 받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국의 부상이 일본의 위협 인식을 키우면서 외교안보의 선택지가 좁아졌다. 그에 더해 한·중과의 과거사·영토 갈등,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가 불거지면서 일본은 ‘존재론적 불안’에 직면했다. 그 대응으로 일본은 샌

11) 동아시아 대분단체제는 이삼성, 『동아시아 대분단체제론』(파주: 한길사, 2023), 607-612 참조.

〈표 1〉 샌프란시스코 체제와 ‘변용된 체제’ 비교

구분	샌프란시스코 체제	변용된 체제
형성 배경	• 냉전 개시, 한국전쟁에 대응해 미일 동맹 구축	• 탈냉전 이후 미·중 경쟁 심화, 일본의 경제성·지위 불안
물질적 특징	• 미군에 기지 제공, 일본의 군사력 제한, 평화헌법의 구속	• ‘집단적 자위권’ 합법화 • 군비 확장 및 자위대 역할 확대
비물질적 특징	• ‘일폭피해’ 정체성에 기반한 평화주의·가해 역사에 대한 침묵	• 역사수정주의와 ‘납치 피해자 정체성’ 전면화·과거사 면책 서사를 통한 존재론적 안보 확보
목표	• 냉전질서의 안정적 유지	• 일본의 전략적 자율성 확대

자료: 저자 작성.

프란시스코 체제 속에서 외교·안보적 자율성을 키우고 동아시아 질서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중심국인 일본이 탈냉전기 이 체제에 발생한 균열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용(reshaping)한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이중 분단’ 체제에 내재한 긴장이 탈냉전 시기 일본과 주변국 간 갈등적 상호작용을 초래했고, 이 충격이 일본으로 하여금 체제 변용을 추동하도록 했다. 변용된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① 미국의 질서규정력은 유지되고 있으나, ② 일본의 자율성이 확대되었고, ③ 일본의 국가정체성이 ‘평화국가’에서 ‘보통국가’로 전환되었으며, ④ 주변국과의 갈등이 전면화된 것이 특징이다.

1) 역사수정주의의 등장

탈냉전을 계기로 미일 동맹이 경제마찰, 걸프전 파병¹²⁾을 둘러싼

12) 남창희, “일본의 국제안보공헌론의 구체화 과정에 대한 연구: 방위정책사의

갈등으로 이완되었고, 냉전 시기 응결 상태였던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책임 문제가 부각하자 일본의 불안감이 커졌다.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평화헌법 제정과 피폭 체험은 일본에 평화 국가이자 ‘세계 유일의 피폭국’이라는 고유성을 부여했다. 이 고유성은 가해의 역사가 피해의 기억으로 전도되기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었다. 일본은 원폭 피해자들의 고통을 동원하고 재배열함으로써 ‘전쟁피해자=일본 국민’이라는 집단정체성을 구축했으나, 이 정체성은 천황과 미국을 가해자로 지목할 수 없으므로 인해 ‘탈역사화’된 것이었다.

탈냉전기 권위주의 정권 아래에 있던 한국과 대만이 민주화되면서 식민지배와 침략의 과거사를 봉인한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균열되기 시작했다. 동아시아 각국의 개인들이 직접 일본의 책임을 묻는 ‘증언의 시대’가 열리면서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 문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중국·조선인의 강제연행 문제, 사할린 잔류 한국인의 귀환 운동, 대만인 일본군 병사의 보상 청구 등 일본에 대한 사죄 및 배상요구가 분출했다.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부정의(不正義), 일본 평화주의의 위선이 드러나자 일본인들은 정체성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일본 정부가 고노담화(1993), 무라야마 담화(1995), 일본군 ‘위안부’ 교과서 기술 등 주변국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한 것은 일본 보수 우익들의 반발을 초래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가져온 충격은 역사수정주의에 의한 백래시의 추동력이 되었다.¹³⁾ 일본의 역사수정주의는 역사 왜곡이나 미화를 넘어 국가정체성을 재구성하기 위한 담론

轉機로서 자위대의 캄보디아 유엔 PKO 참여 사례를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제19집 2호(2009), 464-466.

13) 조경희, “일본의 역사수정주의·국가주의·백래시의 연동: ‘새역모’와 ‘일본회의’를 중심으로,” 『황해문화』 제105호(2019), 118-119.

투쟁의 수단이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비판은 탈냉전기 일본 사회에 존재론적 불안으로 작용했다. 일본은 역사수정주의 담론 확산을 통해 정체성 방어에 나섰고, '기억의 관리'를 통해 교과서에서 '중군 위안부'라는 표현을 삭제했다.¹⁴⁾ 일본의 역사수정주의는 존재론적 불안을 해소하고 샌프란시스코 체제에 의해 주조된 자기 서사를 재확인하려는 '정체성 정치'의 기반이 되었다.

2) 납치·영토 갈등과 '피해자 정체성'의 확립

2002년 9월 17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총리가 평양을 방문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사상 첫 북일 정상회담을 갖고 국교 정상화 방침을 담은 '북일 평양선언'을 채택했다.¹⁵⁾ 김정일 위원장은 일본인 납치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북한은 일본 정부가 납치 피해자로 인정한 13명 중 4명은 생존, 8명은 사망했으며, 1명은 입북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체주의 국가 최고지도자의 오류 인정이 국가시스템의 근간을 위협하게 할 수도 있는 사안임을 고려하면 김정일의 사죄는 북일 관계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의 보수우익들은 납치 피해자 전원 귀환의 목표를 내걸고 북일 국교정상화 국면을 '납치 국면'으로 전환했다.¹⁶⁾ 이를 주도한 정치인 아베 신조(安倍晉

14) 首相官邸, “令和3年4月27日(火)定例閣議案件,” <https://www.kantei.go.jp/jp/kakugi/2021/kakugi-2021042701.html>.

15) “조일평양선언,” 『로동신문』, 2002년 9월 18일.

16) 和田春樹, “拉致問題-解決への道,” 『世界』, 増刊, 4月(2007), 68-69.

三)는 2006년 총리가 된 뒤 “납치피해자가 전원 생존해 있다는 전제로 (拉致被害者が全員生存しているとの前提に立って)” 모든 납치피해자의 생환을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라고 했다.¹⁷⁾

1977년 일본 니가타(新潟)시의 13세의 여중생으로 방과후 귀가 도중 납치된 요코타 메구미(横田めぐみ)의 사연이 부모의 강연과 책은 물론 TV드라마와 애니메이션, 영화로 제작돼 유포되었다. 일본 정부 납치 대책본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납치 문제의 ‘국민 서사화’를 꾀했는데 이는 피해자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시도로 보였다. 이는 19세기 후반 일본 근대국가 형성을 위해 위로부터 내셔널리즘이 동원되었다는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의 지적을 상기시킨다.

일본의 유신은 그와 같은 변혁 방식 때문에, 메이지 정부의 지도자들은 민중들 사이의 자발적·능동적 국민적 연대의식의 성장에 의존할 수 없었으며, 더구나 그들의 끊임없는 대외적 위기감으로 인해 급속한 애국심의 환기가 필요하게 되어, 국가교육에 의해 그것을 위로부터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강조 부분은 저자).¹⁸⁾

후나바시 요이치(船橋洋一)는 납치문제에 대해 ‘일본이란 무엇이고, 일본은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는가(日本とは何か“日本はどのような国であ

17) “第165回(臨時会) 安倍晋三内閣総理大臣 所信表明演説,(2006.9.29.),” 政策研究大学院大学・東京大学東洋文化研究所 日本政治・国際関係データベース『世界と日本』, <https://worldjpn.net/documents/texts/pm/20060929.SWJ.html>.

18)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 『현대정치 사상과 행동』, 김석근 옮김(파주:한길사, 1997), 207.

るべきか)’를 묻는 정체성 정치를 탄생시켰다고 평가했다.¹⁹⁾ 납치문제는 탈냉전기 불안정한 국제질서하의 일본에 피해자라는 국가정체성을 부여했다. 일본은 납치문제를 국민 서사로 만들고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담론의 확산을 통해 존재론적 안보(ontological security)를 확보하고자 했다. 납치 문제에 일본인들의 정념(情念)을 투사함으로써 일본을 ‘국민 국가’로 재구성하는 네이션리빌딩(nation-rebuilding)의 성격을 띤다.

보수 세력은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일본 사회의 잠재된 불안을 자극함으로써 일본의 ‘평화국가 정체성’을 비판했고, 자위대 재무장, 집단적 자위권 용인, 헌법 개정 담론들을 전개했다. 납치문제가 일본의 안보개념의 외연을 확장하고, ‘보통국가’ 담론을 활성화하는 촉매가 된 것이다.

이 시기 일본의 움직이는 내적 동기는 ‘존재론적 안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²⁰⁾ 개인은 변동성이 강한 시공간적 속성에 직면하면 자아 정체성의 안정·연속성을 확보함으로써 실존적 위협에 대처할 수 있으며, 그런 방식으로 자아 정체성이 유지될 수 있다는 신념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개인의 ‘전기적 연속(biographical continuity)’을 통해 정체성이 형성·유지될 때 존재론적 안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제

19) 船橋洋一, 『宿命の子: 安倍晋三政権クロニクル 下』(東京: 文藝春秋, 2024), 231.

20) 존재론적 안보는 개인의 내재적 변수에 집중하여 자아 정체성의 안정과 지속을 실존에 대한 안보확보의 핵심기제로 상정하는 이론이다. 의사 랭(Laing)이 정신분석 연구를 위해 확립한 이론이나 국제관계이론에도 응용되고 있다. Robert D. Laing, *The Divided Self: An Existential Study in Sanity and Madness* (England: Penguin Books, 1969), 41-43; 은용수·김성철, “존재론적 안보(ontological security)의 동학: 미국의 대중 강경책과 미중경쟁,” 『국제정치논총』 제62집 2호(2022), 72.

를 통해 공고화된 자아 정체성은 실존에 대한 보호막으로 작동한다.

일본의 역사수정주의는 정체성 안정화 전략의 성격을 띤다. 주변국의 지속적인 과거사 추궁은 일본에 ‘가해자’라는 낙인을 강화하며 전후 ‘평화주의’ 국가정체성을 훼손했다. 일본은 역사교과서 수정, ‘고노담화’ 재해석 시도 등 과거의 재서사화(re-narration)를 통해 자신을 ‘이미 충분히 사과한 평화국가’로 재정립하려 한다. 역사수정주의 담론들은 전쟁 책임을 부인하거나 희석시킴으로써 ‘존재론적 안보’를 추구한다. 이런 ‘기억 정치’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지만, 내적으로는 ‘전기적 연속’을 강화한다. 일본은 납치 피해자 요코타 메구미(横田めぐみ)의 사연을 ‘국민적 서사’로 만들었다. ‘피해자 서사’는 일본이 정체성 불안에서 벗어나 존재론적 안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실천이었다.

납치문제로 북일 수교 교섭은 중단되었으나, ‘존재론적 안보’ 차원에서 본다면 납치문제를 미해결 상태로 두는 것이 일본의 외교적 합리성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미첸(Jennifer Mitzen)에 따르면 존재론적 안보를 추구하는 국가는 정치적 갈등 속에서 충분한 인식적·물리적 안보 이익을 제공받는다면 갈등을 해소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인다.²¹⁾ ‘신뢰할 수 없는 북한’과의 관계개선으로 초래될 불안을 제거하는 것이 ‘인식적 안보이익’이 되는 것이다.

납치문제는 일본이 한반도에 대한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전환토록 했다. ‘원폭 피해자 정체성’과 달리 납치문제는 ‘가해자’가 뚜렷했다. 원폭피해를 상기하는 것이 일본의 침략 역사를 망각하는 과정인 것과 마찬가지로 납치 피해도 일본의 식민 지배의 가해성을 희석시켰다.

21) Jennifer Mitzen, “Ontological Security in World Politics: State Identity and the Security Dilemma,”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12, no. 3 (2006): 343.

2010년대 발발한 중일 영토갈등은 일본의 과잉단속이 발단이었으나, 중국이 거칠게 반발하면서 일본 사회의 불안을 자극했다. 2010년 9월 7일 센카쿠(尖閣) 열도 해역에서 벌어진 중국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의 충돌 사태는 일본 정부가 어업협정의 틀에서 벗어나 중국 선장을 공무집행 방해로 장기 구속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²²⁾ 1997년 중일 신어업협정에서는 센카쿠 열도의 북부인 북위 27도 이상에 잠정수역이 설정되었고, 남부인 북위 25~26도 선은 적용 구역에서 제외되었다. 일본은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을 구속 대신 강제 퇴치하고, 센카쿠 열도에 상륙한 중국인은 구속하되 중국에 강제 송환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신어업협정 첨부 문서에도 센카쿠 열도 해역이 포함된 곳에서 “중국 국민에 대해 수역에서 어업에 관한 자국의 관계법령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²³⁾ 이 협정에 비춰보면 해상보안청의 과잉단속이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었다.

2012년에 발생한 센카쿠 열도 중일 충돌은 우익 성향의 도쿄도 지사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가 주요 행위자였다.²⁴⁾ 그는 2012년 4월 16일 민주당 정부의 대중 저자세 외교를 비판하면서 광역자치단체인 도쿄도가 센카쿠 열도의 우오쓰리섬 등 3개 섬을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도쿄도 대신 정부가 국유

22) 최희식, “동북아시아에서의 해양·영토 분쟁: 독도와 센카쿠 문제를 중심으로,” 『아시아리뷰』 제3권 2호(2013), 52-54; 孫崎亨, 『日本の領土問題: 尖閣・竹島・北方四島』(東京: ちくま新書, 2011), 81-84.

23) 시라이 사토시(白井聡), “어업에 관한 일본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협정 제6조 (b) 항의 수역에 관한 서간,” 정선태 옮김, 『영속패권론: 전후 일본의 핵심』(서울: 이숲, 2017), 72.

24) 이정환,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와 2012년 센카쿠 분쟁화의 일본 국내 정치과정,” 『아시아리뷰』 제8권 1호(2018), 179-181.

화하는 것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7월 7일 국유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자극받은 중국이 9월 11일 센카쿠 열도를 자국의 영해기선으로 발표했고, 해양감시선을 센카쿠 해역에 진입시켰다. 9월 18일에는 중국 내 100여 개 도시에서 반일 시위가 격렬히 전개되었다. 센카쿠 열도 갈등은 '중국이 공세적 해양정책을 펴면서 일본 영토까지 무단 침범한다'는 서사를 만들어냈고, 일본은 그로 인한 '피해자'라는 의식을 강화했다. 2012년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갈등도 대통령 이명박의 8월 10일 독도 방문으로 정점에 달했다.

센카쿠·독도 영유권 갈등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일본 영토 포기 대상에 두 섬이 명시되지 않았던 것이 원인이다. 그럼에도 일본 인들은 샌프란시스코 체제로 형성된 동아시아 전후질서가 위협받고 있다는 불안을 느꼈다. 이는 북한의 납치문제로 인해 형성된 '피해자 정체성'과 결합하며 '강한 일본'이 필요하다는 담론을 생산해 냈다.

3) 미일 동맹의 이완과 재강화

탈냉전을 전후로 미일 동맹이 경제 마찰, 걸프전 파병 등으로 이완되자 일본은 아시아 지역주의에 참가하려 모색했으나 미국의 견제를 받았다. 일본은 1997년 8월 국제통화기금 주최 태국 지원관련 회의를 거치면서 아시아통화기금(AMF: Asian Monetary Fund) 구상을 마련했으나 미국은 AMF를 아시아에서 독자성을 확보하려는 일본의 전략으로 간주해 반대했다.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미국과 동아시아 각국을 양자 동맹으로 연결하되 역내 국가 간 수평적 연결은 억제하는 '중심축-바퀴살(hub-and-spoke) 구조'라는 점에서 볼 때 동아시아 지역주의는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균열시키려는 움직임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주의는 2009년 9월 총선에서 자민당 정권을 무너뜨리고 집권한 민주당 정부에서 재차 전개되었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는 ‘긴밀하고 대등한 미일 관계’와 ‘동아시아공동체 구축’을 선거 공약²⁵⁾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하토야마의 대외 구상은 오키나와(沖繩)의 후텐마(普天間)에 위치한 미 해병대 기지의 현외(縣外)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과의 심각한 갈등을 빚은 끝에 그가 10개월 만에 사퇴함으로써 동력을 상실했다.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물리적 기반인 오키나와 미군 기지를 미국과의 합의²⁶⁾를 번복하면서까지 현 바깥으로 이전하겠다는 하토야마의 방침은 샌프란시스코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되어 미국의 강압적 대응을 유발했다.

미군기지 이전 시도와 좌절은 일본의 ‘존재론적 불안’을 자극했다. 샌프란시스코 체제 속에서 ‘미국에 의해 안전을 보장받는 평화국가’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모색하려던 시도가 실패하자 ‘방기(abandonment)’ 우려가 되레 커진 것이다. 민주당의 시도가 실패한 이후 일본은 ‘동맹 재강화’로 나아갔다.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이듬해 중일, 한일 영토갈등이 전개되자 일본 사회에서 ‘강한 일본’ 담론이 득세했다. 2012년 12월 중의원 총선에서 ‘일본을 되찾겠다(日本を取り戻す)’는 구호로 승리한 아베 신조의 자민당은 미일 동맹의 재강화와 안보정책의

25) “民主党 政権政策 Manifesto(2009.7.27.),” http://archive.dpi.or.jp/special/manifesto2009/pdf/manifesto_2009.pdf.

26) 1995년 오키나와 초등학교 여학생을 미군 해병 3명이 강간한 사건으로 오키나와 주민저항이 폭발하자 미일 정부는 1996년 4월 후텐마 기지를 나고시 헤노코 해안으로 이전키로 했고, 2009년 광협정을 체결해 합의를 재확인했다. 小泉親司, 『日米軍事同盟史研究: 密約と虚構の五十年』(東京: 新日本出版社, 2002), 328.

대폭적인 변화를 추진했다. 아베 정부는 해석개헌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용인²⁷⁾, ‘무기수출 3원칙’²⁸⁾의 수정,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설치, 안보관련 법제의 재개정²⁹⁾ 등을 실행했다. 이 중 핵심은 집단적 자위권 개념을 반영한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이를 통해 미일 동맹의 작동 범위와 수단이 대폭 강화되었다.

집단적 자위권을 합헌으로 간주한 해석개헌은 ‘전수방위’라는 전후 평화주의의 핵심 원칙을 파기한 것으로, 샌프란시스코 체제하에서 구축한 안보제도와 국가정체성의 구조적 변용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집단적 자위권에 입각해 안보관련 법제를 개정함으로써 미군의 보조세력에 불과하던 자위대가 미군과 공동작전을 포함해 ‘전 지구적 협력’을 할 수 있는 동맹군으로 격상되었다.

아베는 지역전략으로 ‘동아시아공동체’를 대체하는 ‘인도-태평양(FOIP: Free and Open Indo-Pacific)’ 구상을 창안했다.³⁰⁾ 일본의 역내 외교 공간을 인도, 호주, 동남아시아에서 확보하려는 것으로, 아시아의 범주를 확장함으로써 역내 핵심국인 중국을 봉쇄하려는 의도였다. 미일 동맹의 글로벌화와 인도-태평양 구상이 결합함으로써 일본은 미국과 지

27) 일본 정부는 2014년 7월 1일 각료회의 결정으로 헌법해석을 변경해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했다. 日本經濟新聞, “憲法解釈変更を閣議決定集團の自衛権の行使容認,” 2014年 7月 1日, https://www.nikkei.com/article/DGXNASFS0103O_R00C14A7MM8000/.

28) “外務省, 武器輸出三原則等,” <https://www.mofa.go.jp/mofaj/gaiko/arms/mine/sanngen.html>.

29) 内閣官房, “平和安全法制の概要”. <https://www.cas.go.jp/jp/gaiyou/jimu/pdf/gaiyou-heiwaanzenhousei.pdf>.

30) 일본은 2016년 케냐 제6차 아프리카 개발회의에서 이 구상을 제시했고, 2017년 외교청서에 공식적인 지역전략으로 명기했다. 2017년 11월 방일한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에서 이를 미일 공동비전으로 채택했다.

역전략을 공유하고 공동 실행하는 주체로 격상했다.

탈냉전기 일본에 의해 변용된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① 미국의 질서규정력은 유지되고 있으나, ② 일본의 자율성이 확대되었고, ③ 일본의 국가정체성이 ‘평화국가’에서 ‘보통국가’로 전환되었으며, ④ 주변국과의 갈등이 전면화된 것이 특징이라고 전술했다. 납치문제는 일본의 자율성 확대를 추동했고, 역사수정주의와 영토 갈등은 일본의 국가정체성을 ‘보통국가’로 전환시켰다. 일본이 지역주의에서 벗어나 미일 동맹을 재강화함으로써 변용된 체제에서도 미국의 질서규정력은 변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4. 남·북·일 전략적 삼각관계의 성립

1) 북일 교섭,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한일 갈등

탈냉전 초기 일본은 미수교국이던 북한과의 수교교섭을 추진했다. 1988년 7월 7일 오부치 게이조(小渊惠三) 관방장관이 ‘일본 정부 견해(제1차 정부 견해)’를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1988년 3월까지 9개월간 3차례 ‘정부견해’를 발표하며 대북 접근에 속도를 냈다. 1990년 9월 28일 자민당, 사회당 방북단과 북한 노동당과의 ‘3당 공동선언’³¹⁾으로 북일수교 교섭 방침이 확인되었다.

한미 양국은 북일의 급속한 접근을 경계했고, 남북대화에 드라이브

31) “조일관계에 관한 조선로동당, 일본의 자유민주당, 일본사회당의 공동선언,” 『로동신문』, 1990년 9월 29일.

를 걸던 노태우 정부는 ‘한국을 앞서가지 말라’며 일본을 압박했다.³²⁾ 한국의 ‘외압’은 ‘한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한일기본조약 제3조에서 연원한 힘이었다. 일본은 이 조항을 달리 해석³³⁾하면서도 한국과의 외교 갈등을 우려했다. 일본의 대북외교는 샌프란시스코 체제와 그 하부 레짐인 ‘1965년 체제’의 제약으로 인해 자율성을 발휘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북한은 일본과의 수교로 한·소 수교의 충격을 보완하고,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경제 침체를 벗어나려 했다. 그러나 북·일 교섭이 한미 양국의 견제로 제동이 걸리자 북한은 핵개발에 의한 ‘벼랑끝 외교’를 선택하게 되었다.

2018~2019년 문재인 정부와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 의해 전개된 남북대화와 북미 협상 국면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로 불리지만 이 시기 한국과 일본은 국교정상화 이후 가장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이 시기 한국의 행위는 샌프란시스코 체제에 대한 현상변경 시도의 성격을 띠었고, ‘체제 핵심국’인 일본과의 충돌은 불가피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기획은 한일 간 갈등 요소를 내장했다. 기획이 목표하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구축은 한미동맹의 수정을 필요로 한다.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동맹의 지속,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은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트릴레마(trilemma)³⁴⁾이기 때문이다.

32) 노태우 대통령은 1990년 10월 8일 ‘3당 공동선언’의 주역인 가네마루 신(金丸信) 자민당 부총재에게 “수교 이전에 (북한에 대한) 배상이나 (북한과의) 경험 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했다. 山本榮二, 『北朝鮮外交回顧録』(東京: 筑摩書房, 2022), 36.

33) 한일기본조약 제3조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 총회의 결정 제195호(III)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이다. 일본은 ‘국제연합 총회결정’을 삽입함으로써, 총선이 치러지지 않은 북한 지역에는 한국 정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다고 본다.

문제인 정부는 한미군사훈련을 연기하는 한미동맹 ‘수정’을 통해 북한국이 비핵화를 의제화하도록 했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수정은 미국의 안보공약의 약화를 초래하는 만큼 ‘안보 피후견국’인 일본은 수용하기 어려웠다.³⁵⁾ 또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한반도 문제를 미해결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성립한 샌프란시스코 체제에 대한 도전의 성격을 지녔다. 2018년 4월 27일 ‘남북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은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 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을 역사적 과제라고 밝혔는데, 남북의 ‘정전상태’야말로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전제 조건이었다. 중국의 참전으로 한국전쟁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자 미국은 전쟁의 종결을 미루고, 중국-북한을 불인정하는 대신 일본을 동아시아의 보루로 삼기 위해 일본과의 강화를 서두른 결과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이었던 것이다. 남북이 ‘정전 해소 노력’에 합의한 것은 일본이 딛고 선 전후질서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추진은 남북한에 의한 샌프란시스코 체제 변용 시도였으며, 일본과 역사 갈등을 빚어온 한국이 그 주체가 된 것은 일본에게 불안을 유발하는 것이었다.

아베 신조 정부는 ‘한반도 현상변경’에 호의적이던 트럼프의 대북 인식을 교정하고 현상변경을 저지하려 했다. 일본은 비핵화 의제와 관련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미사일 폐기를 요구³⁶⁾했으며, 한미 양국 간에 문안 조율 단계에 들어갔던

34) 구갑우, “평창, ‘임시평화체제’의 형성 원인과 전개: 한반도 안보딜레마와 한국의 ‘삼중모순(trilemma),” 『한국과 국제정치』 제34권 2호(2018), 162-163.

35) 김경, “북미화해와 한일균열: 센토사 합의 이행 협상의 구조적 속성과 귀결,” 『한국과 국제정치』 제34권 3호(2018), 141-145.

‘중전선언’을 반대³⁷⁾함으로써 무산시켰다. 북미 협상이 2019년 2월 28일 무산된 것에 일본은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시기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 재검토,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등이 일본과의 충돌을 초래한 것³⁸⁾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부정적으로 작용³⁹⁾했다.

2) 남·북·일 전략적 삼각관계의 ‘동학’

디트머는 1970년 닉슨의 중국 방문 이후 미·소·중 3국 간 상호작용을 설명하기 위해 전략적 삼각관계(strategic triangle) 모델을 체계화했다.⁴⁰⁾ 디트머는 (a) 3개의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행위자가 있고, (b) 두 행위자간 관계가 제3행위자와의 관계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c) 각 행위자가 다른 두 행위자들의 야합을 방지하거나 자신의 이익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일 때 전략적 삼각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다.

최근의 삼각관계 연구에서는 국제체제 내 권력 배분보다 행위자의 인식과 정향 같은 비물질적 변수에 주목하는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36) 船橋洋一, 『宿命の子: 安倍晋三政権クロニクル 下』(東京: 文藝春秋, 2024), 183-236.

37) 저자와 문재인 정부 핵심 당국자 인터뷰(2024년 10월 11일). 서의동, “탈냉전기 일본의 샌프란시스코 체제 변용과 남·북·일 갈등”(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6), 143-144.

38) “韓国大法院の暴走、国家間の信義を壊した,” 『讀賣新聞』, 2018년 10월 31일.

39) 문재인, 『변방에서 중심으로 문재인 회고록: 외교안보 편』(파주: 김영사, 2024), 589-595.

40) Lowell Dittmer, “The Strategic Triangle: An Elementary Game-Theoretical Analysis,” *World Politics* 33, no. 4 (1981).

〈표 2〉 남·북·일 '전략적 삼각관계'의 국면별 변수

구분	남북관계	북일 관계	한일 관계
탈냉전~201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성·적대성 공존 • 북미대화 한국 중재 역할(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일기본조약으로 인한 관계 제약 • 남북 '통일리스크' • 납치문제로 인한 대북교섭 자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영토 갈등 • 경제협력
'하노이 노딜'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 • 북한, 핵보유국 선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일기본조약의 제약 해소(기대) • '통일리스크' 약화 • 일본의 납치문제 태도 완화(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영토 갈등 잠복 • 경제협력

자료: 저자 작성.

정성철은 인식/정향 변수가 권력변수와 분리되거나 연계되어 삼각관계의 지속과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했다.⁴¹⁾ 권력배분이 정태적이라면 인식과 전략은 동태적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삼각관계에 관한 연구는 상당한 정도로 축적되어 있으나 남·북·일의 삼각관계를 분석단위로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물다. 그 이유는 안보 자원을 미국과의 동맹에 두는 일본과 한국의 속성 상 미국이 참입(參入)하는 4자 구도나 한·미·일 대 북·중·러의 상위 삼각구도가 더 중시되었기 때문이다.

전략적 삼각관계가 성립하려면 각 변(邊)의 상호작용이 활발해야 하지만, 그간에는 북한과 일본 양자 간 상호작용의 절대량이 분석할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한국이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라는 점을 내세워 북일 관계를 견제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유일합법 지위가 한일기본조약에 근거한 것을 고려하면 남·북·일 전략적 삼각관계의 '미형성'은

41) 정성철, "삼각관계 국제정치의 이론화 모색," 정성철 외, 『삼각관계로 바라보는 국제정치』(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22), 44-45.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구조적 제약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2019년 2월 28~29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결렬(하노이 노딜)된 이후의 남·북·일 관계는 새로운 변수들의 등장으로 ‘전략적 삼각관계’가 전면화/정립(鼎立)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일 관계에 등장한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표 2>> 참조). 첫째, 북한의 공세적 핵무력 정책이다. 한국과 일본에 비해 국력의 크기가 작은 북한은 비대칭 전력인 핵무력을 증강함으로써 격차를 상쇄하고자 했다. 핵보유 전략은 국력의 비대칭 관계에서 약소국이 취할 수 있는 유효한 전략이다.

둘째, 남북관계의 성격 변화다. 1991년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으로 북한의 ‘국가성’이 인정되었으나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는 규범을 공유하는 남북을 각기 독립적 행위자로 보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담론을 앞세워 ‘남북 분리(分離)’를 피하면서 남북관계가 질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3년 12월 조선로동당 제8기 9차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에 대해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관계”라고 정의했다.⁴²⁾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언한 배경은 ‘하노이 노딜’로 한국을 지렛대로 북미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는 기대가 사라진 데다, 남북간 국력 격차로 북한이 남한에 흡수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북한은 1990년대 사회주의권 붕괴로 인한 고립과

42)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조선중앙통신』, 2023년 12월 31일.

경제난이 심화하자 한국에 의존해 위기를 벗어나려 했다. 그러나 대북 정책의 변동성이 큰 한국과의 관계유지에 따른 피로가 누적되었고, 교류협력 과정에서 유입된 한국 문화가 체제를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판단했다.⁴³⁾ 북한은 남북관계 자체를 ‘존재론적 불안’으로 여기게 되었으며 한국과의 절연이 존재론적 안보를 확보하는 수단이 된 것이다.

불완전 주권국가인 분단국가는 평화시기에도 생존과 흡수통일의 딜레마가 작동한다. 북한은 한국 지원하에 이뤄지는 변화가 북한의 소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꼈을 것이다.⁴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소멸의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한국전쟁이 주권국가를 이루지 못한 두 주체들 간의 근대 이행기 전쟁이며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본다면 ‘두 국가론’은 정전 상태를 해소하는 의미도 있다. 즉, 북한이 제기한 ‘적대적 두 국가론’은 ‘북한식 종전선언’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 지도부의 발언⁴⁵⁾과 대남 태도로 미뤄 ‘적대적 두 국가론’은 적대성보다는 남북 분립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남북 분립으로 북한이 독립적 행위자가 된다면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하부 레짐인 ‘1965년 체제’⁴⁶⁾도 변용될 수밖에 없다. 한국은 한일기

43) 정수희·민경태, “적대적 두 국가론의 공식화와 북한 문화예술 정책의 변화: 민족공동체 지향에서 국가정체성 강화로,” 『인문과학연구』 제41권(2025), 176-177.

44) 전재성, 『동북아 국제정치이론: 불완전 주권국가들의 국제정치』(파주: 한울엠플러스, 2020), 99-100.

45) 김정은은 2024년 10월 7일 국방종합대학 연설에서 “우리는 솔직히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의식하는것조차도 소름이 끼치고 그 인간들과는 마주서고싶지도 않습니다”라고 했다. 『로동신문』, 2024년 10월 8일.

46) ‘1965년 체제’는 19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 경제협력협정,

본조약 제3조를 근거로 한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를 주장해 왔고, 일본은 한국과의 외교마찰을 꺼려해 북일 교섭에서 북한이 요구한 ‘전후 45년 보상’의 의제화를 거부한 바 있다. 한반도에서 ‘1민족 2국가’ 체제가 성립한다면 한국의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논리를 기반으로 한 남·북·일 관계는 수정될 수밖에 없다. 북한의 ‘두 국가론’은 일본의 대북 접근을 가로막는 제도적·관념적 제약울 소거할 뿐 아니라 남북통일로 인한 일본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는 의미도 있다.⁴⁷⁾

셋째, 일본의 자율성이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2002년 북일 정상회담으로 납치문제가 표면화된 이후 북일 관계는 독자성을 갖게 되었다. 대북 접근에 한미의 양해를 얻어야 했던 일본은 국정 주요 과제인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한·미의 양해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갔다. 납치문제의 동학이 일본의 외교 자율성을 제약해온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변용한 것이다. 2014년 5월 북일 ‘스톡홀름 합의’는 이를 방증한다. 북일은 합의문에서 “국교 정상화” 문구를 담았고, 일본은 대북 독자제재를 해제했다. 북한의 3차례 핵 실험으로 대북제재가 강화되던 당시 상황에서 스톡홀름 합의는 국제 레짐을 이탈하는 것이다. 아베 총리가 합의 한 달여 뒤 미국의 동의 없이 방북을 추진한 것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재임기간의 북일 물밑 접촉 정황⁴⁸⁾에서 보듯 일본은 납치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독자적 대북 접근을 시

어업협정 등을 축으로 형성된 한일 정치 경제 외교관계를 가리킨다.

47) 일본은 통일 한국이 대일 적대성을 강화하거나 중국에 경사될 가능성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양현, “일본의 대한반도 전략인식: 한·미 동맹과 한반도 통일 문제를 중심으로,” 『계간 외교』 제127호(2018), 118, 120-122.

48) “김여정 “日 정치적 결단하면 양국에 새 미래… 총리 방북할 수도”(종합), 『연합뉴스』, 2024년 2월 15일.

도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도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대일 태도 변화의 움직임을 보였다. 2021년 8차 당대회 로동당 규약에서 북한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 무력을 몰아내고 온갖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며 일본 군국주의의 재침 책동을 짓부시며”라는 문구를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 무력을 철거시키고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정치 군사적 지배를 종국적으로 청산하며 온갖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고”로 수정했다.⁴⁹⁾ 북한이 당규약에서 ‘일본 군국주의’라는 표현을 삭제한 것은 북한의 대외위협 인식이 ‘미제-일본 군국주의’라는 2중 적대구조에서 ‘미제-외세일반’으로 전환된 것이자 ‘대일 적대시 정책’을 완화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북한의 대외관계 인식에서 대남 적대성 강화와 대일 적대성 완화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북한이 한반도를 민족 해방 대신 ‘국가 간 경쟁’의 공간으로 재인식하고 있는 징후로 보인다.

한국은 탈냉전 이후 한반도의 평화적 현상 변경을 지속적으로 시도했으며, 노태우·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에 부분적인 성과를 보였으나 북핵 변수의 작용으로 현상변경에는 실패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과거사 문제 제기를 통해 남북·한일 관계의 동시 변용을 꾀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한반도 문제를 미해결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안정성을 확보하는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변용을 시도한 것이었으나 북미 협상의 무산으로 중단되었다. 문재인 정부 시기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판결은 ‘식민지배 합법론’의 기반 위에 성립한 ‘1965년 체제’에 대한 변용 시도⁵⁰⁾였으나 일본의 반도체

49) “북, 76년 지켜온 ‘남한 혁명론’ 사실상 폐기,” 『한겨레』, 2021년 6월 1일.

50) 법원의 결정이었으나 피해자와 시민사회가 제기한 소송의 결과라는 점이고, 당시 정부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변용 시도’에 포함시켰다.

소재 수출규제라는 보복조치를 초래했을 뿐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한국은 또한 남북관계의 급진전을 우려한 미국의 견제로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사업을 재개하지 못했다. 한국은 대미 자율성을 발휘할 의지와 능력의 결여로 남북관계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일본이 납치를 명분으로 북일 스톡홀름 합의에서 독자적 대북 교섭력을 발휘한 것과 대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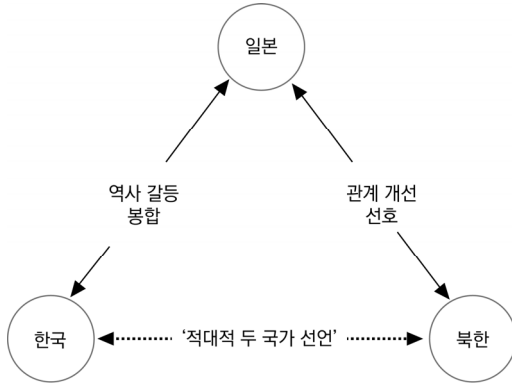
디트머가 제시한 삼각관계의 3가지 유형은 A, B, C가 상호 우호관계를 갖는 '3자 동거(ménage à trois)', 중추 A가 양쪽 날개의 B, C와 각각 우호 관계를 갖는 반면 B, C 사이에는 부정적인 '낭만적 삼각관계(romantic triangle)', A와 B, A와 C의 관계가 부정적인 반면 B와 C의 관계는 긍정적인 '안정적 결혼(stable marriage)'이다. 디트머는 전략적 삼각관계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는 낭만적 삼각관계의 '중추(pivot)'라고 봤다.

디트머의 모델을 '하노이 노딜' 이후의 남·북·일 관계에 적용하면, 아래 <그림 1>에서 보듯 남북관계는 악화된 반면 한일 역사 갈등의 잠복,⁵¹⁾ 북한의 대일 적대성 완화로 일본이 중추(pivot)를 차지하고 남북이 2개의 날개(wing)로 자리 잡는 '낭만적 삼각관계'로 변환했다. 북한의 핵무력 보유, 북한의 남북관계 분리 시도, 일본의 자율성 확대 등의 변화가 전략적 삼각관계를 변환시킨 것이다.

2019년 이후 남·북·일 관계는 북한과 일본에 의해 재배열(realignment)되고 있다. 이는 북한이 남북관계를 지렛대로 삼아 미국, 일본과 관계개선을 추진하던 탈냉전 초기 전략의 전면적인 수정이자

51) 윤석열 정부가 2023년 3월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대해 일본 기업의 책임을 묻지 않는 '제3자 변제' 방안을 내놓음으로써 역사 갈등이 봉합되었다.

〈그림 1〉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일 전략적 삼각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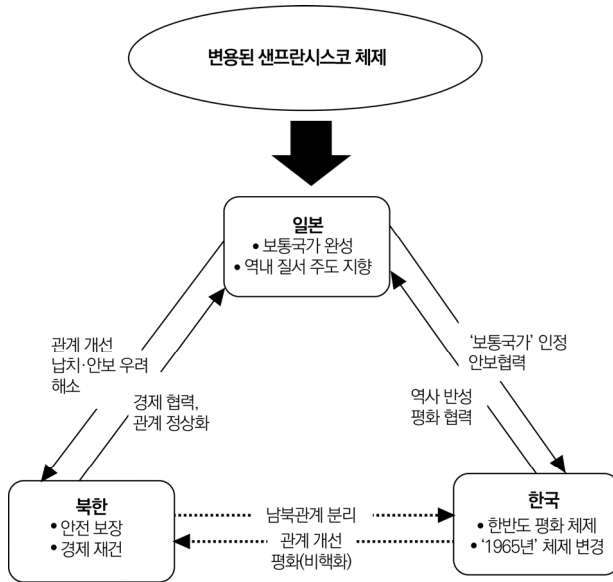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한반도 현상변경’에 일본이 참여할 공간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탈냉전 초기에는 한국이 ‘중추’의 위치에서 관계를 주도했으나 일본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체제 변용이 발생했고, 수동적 위치에 있던 북한이 핵 보유와 남북관계 분리 시도로 3국 관계를 재배열할 동력을 갖게 되었다. 한국은 일본과의 역사 갈등으로 인해 ‘중추’의 위치가 흔들렸고, 남북관계의 변질로 주도성을 잃게 되었다.

〈그림 2〉에서 보듯 일본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납치문제와 안보 위협을 해소할 것을 기대하는 한편, 한국으로부터는 ‘보통국가’로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1965년 체제’ 변경을 희망하는 한국은 일본의 보통국가를 인정하는 대신 그 교환품목으로 역사반성 및 한반도 평화협력을 일본으로부터 받아내려 한다. 북한에 대해서는 관계개선과 한반도 평화·비핵화를 희망하지만, 전략적

〈그림 2〉 변용된 샌프란시스코 체제하 남·북·일 전략적 삼각관계



자료: 저자 작성.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한 탓에 대가로 공급할 품목이 뚜렷하지 않다. 북한은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와 경제협력을 원하고 있고, 일본과의 독자적 거래를 위해 남북관계의 분리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시기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되었으나 남·북·일 삼각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안보 자원을 미국과의 동맹에 두는 일본과 한국의 속성 상 미국의 참입(參入)은 변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정부 시기의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가 중국 견제에 무게중심이 두어진 것을 고려할 때 남·북·일 삼각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북한은 핵보유국 선언과 ‘적대적 두 국가’로 이 시기 삼각관계의 주요 행위자로 나섰으며, 일본은 남치 문제로 확보한 대북 교섭력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합의한 캠프 데이비드 합의⁵²⁾이후에도 북한과 일본 기시다 내각간의 물밑접촉이 진행되었던 정황은 이런 가설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한국이 대미 자율성을 확보하지 않는 한 남·북·일 관계는 일본을 ‘중추’로 하는 ‘낭만적 삼각관계’의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5. 결론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을 거치며 미국에 의해 구축된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체제에 내장된 긴장으로 인해 변용이 불가피한 파행(跛行)적 체제였다. 미국이 일본의 식민주의와 침략전쟁의 책임을 최소화함으로써 일본과 중국·남북한 간에 형성된 ‘역사심리적 분단’은 탈냉전기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균열시키는 동학이 되었다.

탈냉전 이후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균열로 일본이 안게 된 ‘존재론적 불안’은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변용하는 추진력이 되었다. 물질적 차원에서는 집단적 자위권의 합법화, 미·일 동맹의 글로벌화, 인도-태평양 구상을 통해 미국과의 동맹을 지렛대로 지역 주도성을 확보하려 했고, 비물질적 차원에서는 역사수정주의 강화와 ‘피해자 정체성’ 확립으로 주변국과의 갈등에 대응했다.

본 연구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역사심리적 분단성이 탈냉전을 맞아 체제를 변용시키는 과정을 일본, 한국, 북한 3자의 상호작용을

52)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2023년 8월 18일에 열렸다.

중심으로 분석했다. 과거사에서 비롯되는 집단 기억과 감정이 동아시아 질서 변화의 물질적 변수인 중국의 부상, 미국 패권의 약화보다 우위에 서는 현상은 샌프란시스코 체제에 내장된 모순에 대한 고찰 없이 충분히 설명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탈냉전기 동아시아에서 일본, 한국, 북한 3자의 상호 작용은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용하기 위해 경쟁하는 ‘전략적 삼각관계’ 구도를 형성했다. 샌프란시스코 체제 변용으로 성립한 남·북·일 삼각관계의 동학이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추가로 변용시키는 전개도 예상된다. 그렇다면 변용된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남·북·일 삼각관계와 상호 구성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핵무력 보유, 남북관계 분리 시도, 일본의 대북 자율성 확대 같은 변화들이 추동하는 남·북·일 삼각관계의 역동성에 주목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1965년 체제’ 변경을 추구하는 한국은 일본을 보통 국가로 인정하는 대신 역사 반성 및 한반도 평화 협력을 거래품목으로 받길 원한다. 북한에 대해서는 관계개선과 한반도 평화·비핵화를 희망하지만,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대가로 제공할 교환품목이 뚜렷하지 않다. 북한은 일본과의 관계정상화와 경제협력을 원하고 있고, 일본과의 거래를 위해 남북관계의 분리를 시도하고 있다. 일본은 보통국가를 완성하기 위해 양국의 협력을 얻어내려고 한다. 남·북·일 삼각관계는 미중 경쟁의 심화와 그에 따른 한·미·일 협력 강화라는 외부 변수로 인해 다이내믹스의 탄력이 약화할 가능성을 안고 있으나, 이해관계의 고유성과 대미 자율성에 기반한 내구성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북·일 3자 모두 상호관계에서 자율적 주체로 정립해야 삼각관계 게임이 활성화될 것이다. 한국이 남북관계를 포함한 대외정책에서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일본이 삼각관계의 '중추'를 점하는 구도가 고착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탈냉전기 동아시아에서 역사심리적 분단, 존재론적 불안, 인정욕구 같은 비물질적 변수가 '질서 재구성'의 동학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논증하고자 했다. 중국의 부상, 미국 패권의 약화 등 물질적 변수만으로는 동아시아의 변화를 면밀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려 시도한 것이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겠다. 가령, 일본의 보통국가 지향은 국력 신장이라는 요인보다는 탈냉전 이후 '평화국가 정체성'에 대한 외부 비판으로부터 촉발된 동학이 보다 적합한 설명변수가 될 것이다.

동아시아 각국의 전략적 삼각관계에서 북·중·소, 한·미·일, 한·중·일 관계에 대한 연구는 축적되어 있으나 남·북·일 삼각관계를 분석 단위로 하는 연구가 드물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시론적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분석 대상이 일본에 치우쳐 있고, 남·북·일 삼각관계의 분석 틀이 정교하지 못하다는 점은 이 연구의 한계다. 주된 분석 대상이 비물질적 변수라고 해도, 중국의 부상 등 권력 분포의 변화가 비물질적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도 심도 있게 살피지 못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두 층위의 변수들에 대한 분석의 균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투고: 2026.03.03. / 수정: 2026.04.02. / 채택: 2026.04.06.

참고문헌

1. 북한 자료

1) 기타 자료

『로동신문』, 1990년 9월 29일; 2002년 9월 18일; 2024년 10월 8일.

『조선중앙통신』, 2023년 12월 31일.

2. 국내 자료

1) 단행본

김학재, 『판문점 체제의 기원: 한국전쟁과 자유주의 평화 기획』, 서울: 후마니타스, 2015.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 『현대정치 사상과 행동』, 김석근 옮김, 파주: 한길사, 1997.

시라이 사토시(白井昭), 『영속패전론: 전후 일본의 핵심』, 정선태 옮김, 서울: 이숲, 2017.

이리에 아키라(入江昭), 『日本の 外交』, 이성환 옮김, 서울: 푸른미디어, 2002.

이상성, 『동아시아 대분단체제론』, 파주: 한길사, 2023.

전재성, 『동북아 국제정치이론: 불안전 주권국가들의 국제정치』, 파주: 한울엠플러스, 2020.

정성철, “삼각관계 국제정치의 이론화 모색.” 정성철 외, 『삼각관계로 바라보는 국제정치』, 17-56,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22.

2) 논문

구갑우, “평창, ‘임시평화체제’의 형성 원인과 전개: 한반도 안보딜레마와 한국의 ‘삼중 모순(trilemma)’.” 『한국과 국제정치』 제34권 2호(2018), 137-169.

김정, “북미화해와 한일균열: 센토사 합의 이행 협상의 구조적 속성과 귀결.” 『한국과 국제정치』 제34권 3호(2018), 119-150.

- 남창희. “일본의 국제안보공헌론의 구체화 과정에 대한 연구: 방위정책사의 轉機로서 자위대의 캄보디아 유엔 PKO 참여 사례를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제19집 2호(2009), 461-482.
- 신옥희. “일본문제에서 ‘북한문제’로: 한국전쟁을 통한 동북아시아에서의 위협전이.”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8집 1호(2016), 151-177.
- 은용수·김성철. “존재론적 안보(ontological security)의 동학: 미국의 대중 강경책과 미중경쟁.” 『국제정치논총』 제62집 2호(2022), 67-106.
- 은용수·용채영. “국제정치학 감정연구의 쟁점, 함의, 그리고 향배.” 『세계정치』 제29권(2018), 159-201.
- 이동수. “역사화해를 위한 조건: 독일-폴란드 역사화해를 중심으로.” 『서강인문논총』 제56집(2019), 103-135.
- 이정환.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郎)와 2012년 센카쿠 분쟁화의 일본 국내 정치과정.” 『아시아리뷰』 제8권 1호(2018), 175-201.
- 정병준. “한국의 샌프란시스코평화회담 참가문제와 배제과정.” 『한국과 국제정치』 제36권 3호(2020), 1-42.
- 정수희·민경태. “‘적대적 두 국가론’의 공식화와 북한 문화예술 정책의 변화: 민족공동체 지향에서 국가정체성 강화로.” 『인문과학연구』 제41권(2025), 169-201.
- 조경희. “일본의 역사수정주의·국가주의·백래시의 연동: ‘새역모’와 ‘일본회의’를 중심으로.” 『황해문화』 제105호(2019), 98-119.
- 조양현. “일본의 대한반도 전략인식: 한·미 동맹과 한반도 통일 문제를 중심으로.” 『계간 외교』 제127호(2018), 118-132.
- 최희식. “동북아시아에서의 해양·영토 분쟁: 독도와 센카쿠 문제를 중심으로.” 『아시아리뷰』 제3권 2호(2013), 33-63.
- 하라 키미에(原貴美恵).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동아시아 영토갈등의 기원.” 『영토해양연구』 제22호(2021), 6-21.
- 서의동. “탈냉전기 일본의 샌프란시스코 체제 변용과 남·북·일 갈등.”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6.

3) 기타 자료

『연합뉴스』, 2024년 2월 15일.

『한겨레』, 2021년 6월 1일.

3. 국외 자료

1) 단행본

山本榮二. 『北朝鮮外交回顧録』. 東京: 筑摩書房, 2022.

船橋洋一. 『宿命の子: 安倍晋三政権クロニクル 下』. 東京: 文藝春秋, 2024.

小泉親司. 『日米軍事同盟史研究: 密約と虚構の五十年』. 東京: 新日本出版社, 2002.

孫崎亨. 『日本の領土問題: 尖閣・竹島・北方四島』. 東京: ちくま新書, 2011.

淺野豊美. “日韓の國民形成の斷層と和解學: 價値と記憶の融合をめぐる内外政治の共振,” 淺野豊美 編. 『和解學の試み』. 315-351. 東京: 明石書店, 2021.

Laing, Robert D. *The Divided Self: An Existential Study in Sanity and Madness*. England: Penguin Books, 1969.

2) 논문

和田春樹. “拉致問題: 解決への道.” 『世界』. 増刊. 4月(2007), 252-263.

Dittmer, Lowell. “The Strategic Triangle: An Elementary Game: Theoretical Analysis.” *World Politics* 33, no. 4 (1981): 485-515.

Mitzen, Jennifer. “Ontological Security in World Politics: State Identity and the Security Dilemma,”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12, no. 3 (2006): 341-370.

3) 기타 자료

“民主党 政権政策 Manifesto.” 2009.7.27. http://archive.dpj.or.jp/special/manifesto2009/pdf/manifesto_2009.pdf.

首相官邸. “令和3年4月27日(火)定例閣議案件.” <https://www.kantei.go.jp/jp/kakugi/2021/kakugi-2021042701.html>.

“外務省, 武器輸出三原則等.” <https://www.mofa.go.jp/mofaj/gaiko/arms/mine/sanngen.html>.

“第165回(臨時会) 安倍晋三内閣総理大臣 所信表明演説.” 2006.9.29. 政策研究大学院大学・東京大学東洋文化研究所 日本政治・国際関係データベース『世界と日本』. <https://worldjpn.net/documents/texts/pm/20060929.SWJ.html>.

“韓国大法院の暴走, 国家間の信義を壊した.” 『讀賣新聞』, 2018年 10月 31日.

“憲法解釈変更を閣議決定集団的自衛権の行使容認.” 『日本經濟新聞』, 2014年 7月 1日.

Reshaping the San Francisco System in the Post-Cold War Era and the Triangular Relations among South Korea, North Korea, and Japan

Seo, Eui Dong (The Kyunghyang Shinmun)

This study examines how the San Francisco System underwent reshaping after the Cold War, leading to the formation of a strategic triangular relationship among Japa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he San Francisco System was a liberal security order established by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Cold War, with Japan serving as a military hub. Because of the “lenient peace” that minimized Japan’s war responsibility as a defeated nation, conflicts with neighboring countries were crystallized, producing a “dual division” system driven by dynamics stemming from both geopolitical division and historical-psychological division. This system is characterized by four features: the United States’ regulatory power over order, Japan’s limited autonomy, Japan’s identity as a peace state, and latent intra-bloc conflicts. After the Cold War, while the US regulatory power remained intact, systemic reshaping occurred in

the form of Japan's expanded autonomy, changes in its 'national identity', and the intensification of intra-bloc conflicts.

In the post-Cold War era, the interactions among Japa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formed a "strategic triangular relationship," in which each sought to reshape the San Francisco System to its own advantage. The tensions embedded in the system triggered regional conflicts, while the desire of regional actors to reshape the system became the driving force of the triangular dynamics. Japan, with enhanced diplomatic autonomy, and North Korea, as a nuclear-armed state, emerged as independent actors within this triangle. South Korea, however, failed to secure autonomy in inter-Korean relations and, due to historical disputes that worsened relations with Japan, found itself in a disadvantageous position within the strategic triangle.

This article examines how the San Francisco System has been reshaped through the interactions among regional actors after the Cold War, and explores the 'Korean Peninsula status-quo changing game' unfolding within the Japan-South Korea-North Korea triangular relationship.

Keywords: San Francisco System, historical revisionism, ontological security, strategic triangular relationship, change of the status quo on the Korean Peninsula